

**근로복지공단법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449
----------	-------

발의연월일 : 2025. 5. 9.

발 의 자 : 김형동 · 우재준 · 배준영  
조경태 · 김소희 · 유용원  
서일준 · 박덕흠 · 조지연  
김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설립근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단의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산재 · 고용보험 이외에 임금채권, 퇴직연금, 근로복지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공단의 위탁사업들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업무상 재해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단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업,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및 업무상 재해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공단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함(안 제7조).
- 라. 공단의 수입에 정부수탁사업과 관련한 전입금, 국가 보조금을 포함시켜 산재보험 지급 등 공단의 업무특성을 재무제표에 충실히 반영하고, 대내·외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함(안 제18조).
- 마.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공단 이사장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분사무소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함(안 제21조).

## 근로복지공단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설치등기, 이전 등기,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결정과 지급

4.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6.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의 재해 연구

7.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8.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9.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1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제도 운영 및 관리·운용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업무
  12.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13.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근로복지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공단은 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

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④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에서 공단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⑤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른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



으로 본다.

제16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8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전입금, 국가보조금 및 기부금
2. 제6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

4. 제20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9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이입(移入)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하여 손실금을 보전(補填)하고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국세청·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24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2.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3.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4. 산재보험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5. 산재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6. 산재보험법 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7. 산재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8.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수급권자의 유족 여부 확인

9.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벌칙) ①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

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근로복지공단의 명칭은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사업, 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근로복지공단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0조부터 제3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공단”을 “「근로복지공단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에”를 “「근로복지공단법」 제6조 제2항에”로 한다.

제127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③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④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⑦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제32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근

로복지공단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